

野 ‘이태원 참사 국조’ 밀어붙이기… 與 “진상조사 먼저”

3野, 국회의장 등 전방위 압박… 긍정적 민심·野 연대로 자신감 여 ‘여소야대’ 상황서 막을 방법 없어… 예산 국회 물려 협상 필요

여야가 이태원 참사 조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 팽팽한 힘 겨루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번 주 내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라는 논리로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예산 국회와 맞물려 야권의 공세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넘어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예고한 대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김 의장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의장을 향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공식 요청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요청 시한은 ‘이번 주 내’로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원 명단을 미리 준비해서 의장의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이 연일 국정조사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데에는 민심이 국정조사 실시에 긍정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정의당·기본소득당과의 ‘연대’도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과 관련해 사전 유가족 동의가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당국이 당초 희생자 명단을 은폐하려 했으며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명단은 공개해야 하나 유가족이 원치 않으면 (그 뜻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희생자를 보도하지 말라는 준칙을 내렸다. 희생자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이 맞느냐”며 “그간 언론의 참사 보도에서 희생자가 누군지 가리고 보도한 사례가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국정조사를 막기 위한 여권의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로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야권의 압박에 대응할 현실적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현실상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데다 예산 국회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대야 협상 시나리오가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다.

일단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몰 타기 수단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우세한 상황이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밀려 들어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예산 국회까지 겹쳐진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 조사 수용 불가에서 물러나 ‘선 진상조사, 후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오는 24일 이전에 나온다면 판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가 경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범위가 어느 정도 명확해진다면 야당이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필요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피할 수가 없다면 내년도 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등 원내 주요 현안에서 대야(對野)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분간 대외적으로는 국정 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론 흐름과 수사 결과 발표 시기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할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민 3명중 2명 지역화폐 지원 필요성 인정”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화폐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이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대표의원을 맡은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포럼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2%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화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26.8%였다.

아울러 응답자의 84.2%는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었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4%였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9%였다.

전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한 조사에서는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9.2%에 달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3%였다.

이번 조사는 조사기관이 보유한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한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38%포인트다.

/연합뉴스

원참사 /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이상민 재난대책 TF단장이라니 유족 우롱”

민주 최고위 회의… “이태원 참사, 성역없는 수사만이 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대책수립 TF(태스크포스) 단장까지 맡았다고 하는데 (이는)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태도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참사 당시에도 국가는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며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게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유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

졌다. 그분들은 정부의 의도적인 방치, 유족들의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통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며 “절절한 유족들의 호소에 정치가 응답해야 하는데 성역 없는 국정조사, 특검(특별검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와 민생 상황이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금융 취약 계층, 주거 취약 계층,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대 영역에 대해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긴급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우리 당 추산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초부자 특권 감세를 일부

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는 아무 문제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의 비정당한 특권 예산을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 처리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 독재식 언론 통제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자유지수를 추락시킨 MB(이명박)정권의 언론 장악이 재현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 위협에 대해서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野 단독 ‘용산공원 사업예산’ 전액 삭감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간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16일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드는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소위는 이밖에 국가기본도 예산 382억원, 중간소음 성능보강 용자 250억원, 분양주택 용자 1조1393억원 등도 삭감 편성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3천840억원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다가구 매입 임대 2조 5723억원, 전세임대용자 1조208억원, 다가구매입

임대 출자 5074억원 등을 늘려주기로 했다.

예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다며 반발해 회의 진행 중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측은 “용산공원 이전 사업이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당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했다”며 “다만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부지 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정화 작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檢 ‘李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1. 화순, 전원주택 부지, 매매
2. 약 4800평
3. 매매 - 16억 8천만원
4. 문의 . 010 - 3605 - 5000